

해외 출장 보고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Ⅱ) -

2012. 6.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개요

■과제명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I)」
■출장 내용	<p>(목적) 유럽의 가족·미래연구소 및 정부 미래그룹 전문가 면담과 집담회 개최</p> <p>(내용) 가족미래시나리오 도출과정 및 시나리오의 정책화 반영/OECD과 EU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발전 방향 논의 등</p> <p>(면담 및 집담회 대상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가족미래연구팀 - EU 가족미래연구팀 (FAMILY PLATFORM): 오스트리아, 핀란드 - 프랑스 인구가족연구소 (INED) - 핀란드 정부 미래그룹 및 미래연구소 - 스웨덴 미래가족 및 가족정책 연구자
■출장자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출장지	프랑스(파리), 오스트리아(빈)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출장 기간	<p>프랑스·오스트리아팀 : '12.6.11 - 16 (4박6일)</p> <p>핀란드·스웨덴팀 : '12.6.10 - 16 (5박7일)</p>
■비용 부담	본원 연구사업비

II. 목적

- ☐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 도출 과정, 핵심 주제 선정, 시나리오 결과 활용/정책화 반영 과정 등 인터뷰
- ☐ OECD, EU, 각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여성정책 주요 이슈, 가족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 ☐ 3차년도(2013년) 연구의 해외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엄 내용 및 일정 등 협의 추진
 - ※ 해외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엄 계획안(2013년)
 - 주제: 가족미래 대응 사회정책 기조 및 내용변화에 대한 국가사례 발표
 - 내용: 가족관점, 가족미래시나리오 여부,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여부, 중장기계획수립 등 사회정책전반에 걸친 내용변화 등
- ☐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

III. 출장 인력 구성

프랑스, 오스트리아	장혜경, 김소영
핀란드, 스웨덴	김은지, 김영란

IV. 출장 기간

- ☐ 프랑스, 오스트리아 : ‘12.6.11(월)-6.16(토) (4박6일)

- OECD 본부	‘12.6.12(화)
- 프랑스 인구가족연구소 (INED)	‘12.6.13(수)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가족연구소	‘12.6.14(목)~15(금)

- ☐ 핀란드, 스웨덴 : ‘12.6.10(일)-6.16(토) (5박7일)

- 핀란드 EU Family Platform, 미래연구소 등	‘12.6.11(월)~6.12(화)
- 스웨덴 미래연구소 및 스톡홀름대, 옅살라대 등 가족미래연구자	‘12.6.13(수)~6.14(금)

V. 세부 일정

□ 프랑스 • 오스트리아

일시		내용	장소 (예정)
6.11(월)	인천 출발 파리 도착	12:50 인천 출발 17:50 파리 도착	
6.12(화)	13:00-17:00	OECD 본부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 Dr. Barrie Stevens (Deputy Director) - Pierre-Alain Schieb (Head of Futures Projects) 와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project 관련자 1인 *OECD 가족미래프로젝트 관련 및 최근동향 파악	OECD (2, rue André Pascal 75775 Paris Cedex 16)
6.13(수)	9:00-12:00	INED (프랑스 인구가족연구소) - Prioux France (Researcher) - DAURELE Catherine (Adminstrater) *여성가족쟁점 및 협력 관련 인터뷰	INED (133, boulevard Davout 75980 Paris Cédex 20)
	13:00-17:00	INED (프랑스 인구가족연구소) - Gilles Pison (Senior Researcher) 및 INED 연구자 2인 *프랑스 가족의 초상’ 연구 및 보고서 추진 관련 논의	
6.14(목)	파리→빈	10:00 파리 출발 12:05 빈 도착	
	14:00-17:00	AIF ‘EU FamilyPlatform’ 연구자 인터뷰(1) - Sonja Blum (연구총괄자) *미래시나리오프레임 설정단계별 협의	AIF (University of Vienna, Grillparzerstra ße 7/9, A-1010Wien)
6.15(금)	9:00-11:00	AIF ‘EUFamilyPlatform’ 연구자 인터뷰(2) - Olaf Kapella - Christiane Rille-Pfeiffer (Researcher) *국가별 시나리오작성관련 논의	
	빈→서울	15:30 오스트리아 빈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	
6.16(토)		12:20 서울 도착	

□ 핀란드 • 스웨덴

일정		내용	장소 (예정)
6.10(일)	인천 출발 헬싱키도착	10:20 인천 출발 14:00 헬싱키 도착	
6.11(월)	6:00-10:00	헬싱키-> Jyväskylä(기차 4시간 소요)	
	11:00 -16:00	EU Family Platform 연구팀 (Jyväskylä University, Family Research Centre) 집담회 -Kimmo Jokinen소장, Marianne Notko연구원	University of Jyväskylä, Seminaarinkatu 15, 40014 Jyväskylä, Suomi
	18:00-22:00	Jyväskylä->헬싱키(기차 4시간 소요)	
6.12(화)	9:00 -10:30	Finland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인터뷰 -Reijo Aholainen(Counsellor of Education) -Eva Kaunismaa 등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11:00 -14:00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Ms. Riitta Kirjavainen	Prime Minister' s Office, Snellmaninkatu 1A, Helsinki
	15:00 - 16:30	Finland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National Consumer Research Centre - Mika Pantzar소장	헬싱키 경제대학
	헬싱키→ 스톡홀름	9:05 출발 9:05 스톡홀름도착	
	08:00-09:00	스톡홀름->웁살라(기차 1시간)	
6.13(수)	10:00-13:00	스웨덴의 가족여성 전망 연구자 인터뷰 - Paula Blomqvist (웁살라대 교수)	Uppsala University, Biskopsgatan 3 753 10 Uppsala
	15:00-16:00	웁살라->스톡홀름(기차 1시간)	
6.14(목)	10:00-12:00	스웨덴 미래연구소 방문 및 연구자인터뷰 - Peter Johansso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Hölländargatan 13.
	15:00-18:00	스톡홀름대학교 가족연구자 인터뷰 - Daine Sainsbury (스톡홀름대 교수)	Stockholm University, Universitetsvägen 10 A, 106 91, Stockholm
6.15(금)	스톡홀름→ 서울	12:55 스톡홀름 출발 (헬싱키 경유) 14:55 서울 도착	

VI.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1. 프랑스

■ OECD 본부

○ 전문가: Barrie Stevens 외 2인

○ 주요 논의 의제

- 가족미래 이슈 선정배경
- 핵심동인 선정과정(가족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동인은 무엇인가?)
- 정책이슈 선정과정(가족의 어떤 측면을 주목하여야 하는가? 어떤 측면이 미래에 위협으로 부각될 것인가?)
- 미래 시나리오 도출과정(많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 연구물 정책 활용 여부 및 활용계획
- OECD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족, 여성이슈

○ 주요 결과

(가족미래 프로젝트의 배경)

- 가족구성과 가치 등의 변화에 주목하는 국가들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공감했음. 특히 가족부(family ministry)를 만들거나 발전시키는데 관심있는 국가들이 가족미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임
- OECD steering group이 모여 가족이슈 및 주요 질문 도출 : 일-삶의 균형(Family-Life Balance), 저소득층 가족(low-income families)의 통합/재통합, 고령인구(the elderly)의 사회 참여

(프로젝트 추진 단계)

- ① 가족변화 추이 : 20년간 가족변화 추이와 향후 20년의 변화를 예측함

- ② 핵심동인 추출 : 20년 후 주요 동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통해 미래 가족 지형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함
- ③ 시나리오 작업 : 5~10년 동안의 변화는 크지 않음. 따라서 20년 후 가족 변화를 예측할 시나리오 작성함

(시나리오 작성 과정)

- 4개 핵심동인 (경제, 기술, 사회, 인구)에 대한 변화 전망 후 시나리오 개발 워크숍 진행함
- 시나리오 개발 워크숍 : 참가자들이 모여 모더레이터를 두고 시나리오를 개발한 후 최종 시나리오를 투표를 통해 결정함
- 시나리오의 틀 구성 : 매트릭스를 구성할 2개의 축을 구성함.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2개의 축을 설정하게 함. 단,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도록 했음. (예) 경제의 경우 성장률의 높고 낮음은 너무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 여부를 축으로 상정함. 기술 역시 교육이나 성장 등에 도움이 주는 기술에 대해 고려함
- 시나리오의 축을 구성할 때 정책 그 자체가 아닌 정책들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요인들로 설정해야 함. 경제 안정, 기술을 축으로 설정한 것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임
- 2개축을 중심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함. 4개 시나리오마다 한 팀을 구성해 2030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함.
(예) 시장의존도, 교육시스템, 자녀돌봄의 주체 등
- 그룹별 작업한 내용을 공유한 후 토론을 통해 최종 2개 시나리오를 도출함(3개의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도출되어 하나로 수렴함)

(시나리오 작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 정책에 대한 고려, 정책의존도 등을 중심에 두고 시나리오 작성해야 함
(more government <-----> less government)
- 각 나라의 문화, 가치, 가족구조, 고용시장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틀(시나리오 축)을 구축해야 함

- OECD 프로젝트는 일반적, 중립적인(neutral) 축을 상정함
- 핵심동인(경제, 사회, 기술, 인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 필요함.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각 요인들이 통합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모순이 존재하지 않도록 함)
- 시나리오 도출 과정(process)가 매우 중요함. 시나리오 작성은 그 사회의 미래에 대해 구성원,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본 것을 담고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토론을 통해 의미가 있음
- 가족정책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고민해볼 필요 있음. 육아나 여성취업 문제 이외에도 건강정책, 노동시장정책, 운송정책, 주거정책 등 모든 정책들이 가족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후속 프로젝트, 가족이슈 등)

- 고령화와 기술 관련 연구 수행(중)
-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이라는 출판물이 곧 나올 예정임. 그 중 노인인구와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 OECD 정보 통신, 컴퓨터 관련 부서에서 디지털 기술과 노인 인구에 대한 연구 수행중임

■ INED(Institut National Etudes Démographiques)

○ 전문가: Gilles Pison, Catherine DAURELE 외 2인

○ 주요 논의 의제

- 여성·가족과 관련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 가족의 위험을 둘러싼 환경요인들 중 주목해야 할 요인
- 프랑스에서 가족변화의 변화, 위험에 대비한 주목할만한 정책적 대응
- 프랑스 및 EU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족, 여성이슈

○ 주요 결과

(프랑스의 인구, 출산율 변천사)

- 프랑스에서 인구관련 이슈가 제기된 지는 100년이 넘음. 현재 프랑스의 가족정책 이해와 미래조명을 위해서는 역사와 더불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두 세기 전(19세기) 프랑스는 유럽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에 속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2~3배) 2번의 전쟁(보불전쟁,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구가 감소함. 따라서 프랑스는 출산율은 높이기 위해 출산정책을 빨리 시작하게 됨
- 출산정책 초기에는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음 → 1920~30년 법 개정을 통해 낙태와 피임 광고를 금지함. 60~70년대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여성들의 반대, 출산율 저조 등의 이유로 70년대에 낙태가 허용되고 최근 피임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개정함
- 인구와 가족 정책을 전환한 후, 감세 등 여러 다른 방식으로 가족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함

(출산율과 가족 지원)

- 인센티브 제공 : 자녀수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차등을 둬. 두 자녀 가족 월126유로, 세자녀 가족 월287유로, 한자녀 가족은 없음
- 세금 감면(Caution Familiale) : 자녀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 감면됨.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음
- 장려금 : 대가족에게 지급되는 카드를 통해 지원되는 장려금.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해당되는 특별 카드로 대중교통 등 많은 부분에서 할인 받음
- 자녀양육 휴가와 보육시설 제공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관계)

- 과거에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정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성 취업을 장려하고 있음. 그리

고 여성, 커플의 일과 양육 조화를 지원함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

- 20세기 초반 가족정책은 가난한 가족 지원, 모든 가족의 소득 보장 등을 주목표로 함. 출산을 유지 역시 장기간 지속된 가족정책의 목표임.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수당 지급함
- 1970년대는 가족정책의 “사회복지화”가 나타남. 한부모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원 도입, 가족상황에 따른 주거수당 제공 등
- 1980년대에는 일·가족 양립 지원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보육시설 수의 증가와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한 가족에게 대한 재정 지원
- 현재 프랑스는 국가의 재정 압박으로 가족지원의 제약이 있음: 보육서비스를 2세자녀부터 지원했으나 현재는 재정문제로 지원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함

(가족의 변화와 대응)

- 가족변화와 관련해 가족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존재함(예: 가족 장려금을 중지하자는 정책을 내걸고 선거하는 사람은 당선되지 않을 것임).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현재까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지 않으나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 정부에서 내년 경 동성결혼을 허용할 예정임

(‘가족의 초상’(Portraits de familles) 연구)

- 프랑스에는 가족, 커플, 세대간 관계 등에 대한 다수의 개념이 존재하며, 인구의 변화, 가족발달의 단계가 달라지고 있음. 이에 대한 관심에서 프로젝트가 출발함
- INED와 INSEE(국립통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10,000명을 할당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주요 내용은 가족형태(커플결합)의 다양성(동거커플, 비동거커플, 결혼한 부부, 재결합 커플), 자녀가 있는 가족의 모습, 부모 이혼과 아동의 삶, 가족생활 및 가족상황(형태)에 따른 물질적·심리적 빈곤, 가족

과 성역할(누가 무엇을 하는가?) 등임.

■ 프랑스/EU의 여성 · 가족정책 동향

- 유럽 국가들의 가족 관련 중요이슈는 출산율과 가족형태임
- 프랑스 정부가 가족지원에 쓰는 비용은 GDP의 3.8%(세금 우대 포함)로, OECD 평균보다 높음
- 프랑스, 북유럽 국가는 산후 1개월부터 여성들이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가의 보육시설/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를 가능하게 함. 반면 독일은 3살 이하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하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정책이 실행됨
- 가족정책은 한 세기 전부터 친 출산(pro-natalist)정책이며, 이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가 존재함.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커플 지원에 대한 좌, 우파의 정치적 합의(political sensus)가 존재해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가 크지 않음
- 여성정책에 대한 반발(backlash)은 없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 역시 존재함. 전반적으로 여성의 권리,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이 완화됨

■ 향후 연구진간의 교류 방안 및 공유 자료

- 가족미래 시나리오 작성 관련한 자료 및 이메일 토론 등 정보교류 지속
- 2013년도 가족미래 연구의 국제 컨퍼런스 참여 가능성 모색
- 공유자료
 -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2012)
 - Pison, Gilles(2012). France and Germany: a history of criss-crossing demographic curves, *Population & Societies*, 487.
 - Pison, Gilles(2009). France 2008: why are birth numbers still rising?, *Population & Societies*, 454.
 - Luci, Angela & Thevenon, Olivier(2011). Does economic development explain the fertility rebound in OECD countries?, *Population &*

Societies, 481.

- Thevenon, Olivier (2008).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ontrasting models, *Population & Societies*, 448.

2. 오스트리아

■ AIF(Austrian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Univ. of Vienna)

○ 전문가: Olaf Kapella, Sonja Blum외 1인

○ 주요 논의 의제

- 가족미래 이슈 선정배경
- 핵심동인 선정과정(가족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동인은 무엇인가?)
- 정책이슈 선정과정(가족의 어떤 측면을 주목하여야 하는가? 어떤 측면이 미래에 위협으로 부각될 것인가?)
- 미래 시나리오 도출과정(많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 연구물 정책 활용 여부 및 활용계획
- 오스트리아 및 EU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족, 여성이슈

○ 주요 결과

(EU의 Family Platform 연구 배경 및 추진과정)

- Family Platform 연구를 기획하고,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 EU 위원회가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 도출을 원함.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이슈, 연구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함
- 통계적, 수학적 계산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아닌 매우 열린 방식의 토론을 통해 창의적 방식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접근함

(가족미래 시나리오 도출 과정)

- 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소그룹(5명)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3개의

- 요인을 핵심 요인을 선정함. 그룹 간 멤버교체를 통해 자신의 그룹에서 발탁된 요인들에 대해 서로에게 설명하고 다시 핵심 요인 3개를 선정함
- ② 시나리오의 프레임 작성 : 시나리오 프레임은 4개의 동인과 실존영역의 트렌드의 매트릭스로 구성함
- ③ 4개 시나리오의 정의 : 각 동인의 극단적 상황을 기술하고, 각 시나리오를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의함. 두 개의 시나리오는 양 극단에 위치하며(이상적인 시나리오와 그 반대적 상황), 나머지 두 개는 그 중간적 상황임
- ④ 시나리오 묘사 : 시나리오를 묘사하되, 가족의 다양한 형태(한부모가족, 이주가족, 맞벌이 가족 등)을 포함시킴.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차원과 수준을 고려해 폭넓게 묘사되었는데 즉 전세계적/지역적, 유동적/엄격한, 공공/민간, 하향식/상향식 등을 고려함

(핵심동인, 시나리오 도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 정책적 지향을 갖는 연구 목적 설정 : 2035년도의 가족의 모습, 단순한 모습이 아닌 ‘가족의 복지(wellbeing)’를 정의하고, 핵심이슈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민주적인 브레인스토밍과 협업 : 개인이 선택한 여러 동인들을 그룹 작업을 통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핵심동인을 선정함
- 다양한 의견의 수렴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프로젝트 멤버를 구성함 (전공의 다양성 고려, 연구자/NGO/정책기획자 등 참여). 온·오프라인(컨퍼런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족단체, 가족연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개진해 시나리오에 반영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산: 충분한 시간과 토론할 자유를 부여함. 다양한 관점의 참여자들로부터 그룹 역동을 끌어냄

(EU의 가족미래 관련 후속 연구)

- 2040년의 삶을 전망하는 프로젝트 진행 중임
- 가족이행(family in transition)관련 프로젝트 진행. 질적·양적 방법 연구

■ 오스트리아, 독일(동일 언어권)의 여성 · 가족정책 동향

○ 선택의 자유: 모성 VS 유급노동

- “여성이 얼마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가”, “아이 낳고 집에 있을 것인가 vs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가” 와 관련된 이슈
- 육아휴직/급전보상 : 5개의 옵션 제공.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부모들은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함. 5개 옵션은 다음과 같음

30+6: 30개월 또는 부모 모두 수급 시 36개월 동안 월 436유로 지급

20+4: 24개월 또는 부모 모두 수급 시 24개월 동안 월 624유로 지급

15+3: 15개월 또는 부모 모두 수급 시 18개월 동안 월 800유로 지급

12+2: 12개월 또는 부모 모두 수급 시 14개월 동안 월 임금이 1,000유로

이하인 경우 월 1,000유로 지급

12+2(임금기반): 임금이 월1,000~2,000유로인 경우 12개월 또는 부모

모두 수급 시 14개월 동안 가장 최근 받은 순임금의 80% 지급

- 여성이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며 아이를 돌본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면 파트타임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일과 삶의 조화: 여성의 노동권,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 여성의 노동권 보장: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을 더 빨리 일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책 마련(보육시설, 육아휴직 등)
-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어떻게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 일을 하게 하는 것

○ 가족법상의 ‘가족’ 정의와 지원

- 기본법 6조항에 ‘가족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명시함. 여기서 가족은 결혼한 가족을 의미함
-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 실제 법 집행에서는 가족평등을 위해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조세법에 의해 법적 부부가 세금혜택을 조금 더 누림

-

■ 향후 연구진간의 교류 방안 및 공유 자료

- 가족미래 시나리오 작성 관련한 자료 및 이메일 토론 등 정보교류 지속
- 2013년도 가족미래 연구의 국제 컨퍼런스 참여 가능성 모색
- 공유자료
 - 『Wellbeing of Families in Future Europe: Challenges for Research and Policy』 (Olaf Kapella 외 지음, 2011)
 - Rille-Preiffer, Christiane(2012). Country Note from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 Research: Austria.
 - Blum, Sonja & Erler, Daniel(2012). Country Note from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 Research: Germany.
 - Ahrens, Regina, Blum, Sonja, & Gerlach, Irene(2010). Introduction: Family Policies in the German-Speaking Countries Reforms and Explanations, German Policy Studies, 6(3), 1-11.
 - Concept Future Scenarios, Unpublished Document(by Family Platform Project Team)
 - Family Diversity: The 3rd European Congress of Family Science, www.familyscience.eu

3. 핀란드

■ EU FamilyPlatform 연구팀(Jyväskylä 대학 가족연구센터)

(<https://www.jyu.fi/ytk/laitokset/perhetutkimus/en>)

○ 전문가 : Kimmo Jokinen 소장 및 Marianne Notko 연구원

○ 기관 개요

- 다학제적으로 다양한 가족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기관
- FAMILYPLATFORM(2009-2011)의 파트너기관
- 주요 연구 주제 : 가족관련 비교연구, 미래시나리오 등 연구

- 현재 진행 중인 연구

- E-family Coach : 응용과학부와 공동진행, 가정가족상담을 위한 모바일증 제출 개발
- 음주문제 가정의 아동에 대한 프로젝트
- 복수가정에서의 아동의 정서적인 안전문제 프로젝트 : 복합적 가족관계에 있는 아동의 사회적 감정표출, 신뢰구축, 가정안에서의 안전감, 감정 등을 조사함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in multiple family relations (2010-2013)(funded by the Academy of Finland's research programm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SKIDI-KIDS))
- FIT(family in transition) 연구: 가족생활조직이 개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기 전환 지연, 부모기로의 전환 지연 등 전환기 가족에 대한 연구 기획 중

○ 주요 논의 의제

- 미래 연구에서 가족이슈를 중요하게 선정하게 된 배경
- 가족의 미래 변동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한 과정
-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핵심 정책이슈 선정 과정
- 연구결과의 정책에의 반영 및 향후 반영 계획 등
- 핀란드와 EU에서 최근 등장하는 가족 및 여성이슈

○ 주요 결과 (FAMILYPLATFORM 연구 관련)

(가족 이슈 선정 배경)

- EU Commission의 구상이며, 결정이었음
- 가족이 기초적인 사회구성단위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라는데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

(연구과정 참여전문가 그룹)

- 연구자, 가족관련 다양한 GO 및 NGO(어머니단체, 여성단체, 아동단체, 입양아단체 등으로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

(Main Trends와 Key Drivers 설정) 기존의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재해석 및 2차 분석, 델파이, 그룹토론 등의 방법론 동원

- 가족의 역동성 커짐 : 싱글, 일반가정, 한부모, 수양가정 등의 증가

- 여성고용수준 증가 : 노동시장내 여성의 역할 커짐
- 가족내 아동양육자 역할 관심 : 부모됨 공유 요구증가, 부성역할 활성화
- 새로운 불평등- 빈곤가정 등
- 다문화
- care에 대한 공공의 역할 커짐 : 정부의 역할 강화

(미래 가족 변화 전망 연구의 핵심)

- New Research Idea 설정
- What Kind of Family Policy Needed

(주요 방법론 : 내러티브(서사) 만들기)

- 가상의 모델가족 설정, 주요 질문을 던짐
- (주요 질문)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어떤 가족이 미래에 생길 것인가?/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가상의 모델 가족이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서사를 구성함 (※ 아래 표 예시)

(가상모델가족)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레스비언가족	변화방향				
	예상되는문제				
	정책need				
핵가족	변화방향				
	예상되는문제				
	정책need				
입양자녀가 있는 가족	변화방향				
	예상되는문제				
	정책need				
무자녀가족	변화방향				
	예상되는문제				
	정책need				

■ Finland Government Foresight Network(국무총리실 산하)

□ 전문가 (1) : Riitta Kirjavainen(총리실 비서, **FGFN 조직운영**)

○ 주요 논의 의제

- 정부차원의 미래 예측 전망 연구 조직 및 운영
- 미래 전망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응
- EU와 핀란드의 미래 가족의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주요 결과

- (목적)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정부정책지원
- (과정)미래연구 수행(주로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 정부 미래예측보고서 제출 → 의회 future위원회(의원으로 구성)검토, 정부로 검토결과 초안답신 보냄 → 정부에서 재정리
- 핀란드 2030미래예측리포트 작업
 - PMO에서 미래 예측 리포트 초안 작성, 현 정부에 제출한 상황임
 - 주요 내용은 203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의 복지, 환경 문제이며, 가족정책은 국민의 복지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미래보고서의 working theme 선정절차
 - pre-foresight stage : 프로젝트에 필요한 관련자료 수집 등. 관련 전문가 그룹, NGO등과 논의, 2030년 핀란드에 필요하다고 예견되는 정책적 수요 논의, 인터넷 및 국민여론도 참고함
 -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working group
 - 12명의 멤버 배정
 - 2012년 말 작업 종료예정
 - 헬싱키 및 다른 도시에서 7번의 forum.진행, 준정부기구와 NGO 참여

□ 전문가(2): Reijo Aholainen (Counsellor of Education, Foresight in education and Policy planning, Member of the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Eva Kaunismaa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주요 논의 의제

- 가족의 미래와 관련된 연구동향
- 미래 시나리오 도출과정 및 가장 중요한 이슈

- 미래 전망에 따른 정책적 대응
- EU와 핀란드의 가족의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주요 결과

- 90년대 경기침체를 계기로 미래예측과 전망을 토대로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 발생
- 2030년 인구전망(이주자증가, 성별연령구조 등), 경제전망을 예측하기 시작
- 정부에 미래전망관련 기구 설치
- 5개년계획 수립,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전망하고, 액션플랜수립, 교육정책에 반영함 (예: 고용시장 전망에 따라 인력수급대책 마련, 정부가 예측한 산업 전망에 따라 졸업생 수 등 인력 수급계획 수립. 정치적 이해도 고려됨)
- 가족관련 이슈는 양육휴가 논쟁이 있으며, 여성관련 이슈는 고학력 여성문제있음 (예: 여성고학력이 증가하나 대기업 이사회에 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문제 등)

□ 전문가(3): Mika Pantzar (소장, **National Consumer Research Centre**, Helsinki, 재정부 산하의 국책연구소)

○ 주요 논의 의제

- 가족의 미래 전망 및 예측 연구 경험 및 연구 결과
- 가족의 미래 전망 연구 결과의 정부 정책 반영 내용 및 과정

○ 주요 결과

- Future home project/ Technology Future Foresight : 핀란드의 가족 내에서의 소비히스토리화 가족경제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가전집기 기술을 예측하고 시나리오 도출
- 연구결과물이 정부미래예측보고서의 근거자료로 활용됨 : 정부정책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반영됨. 정책기획부분에 family oriented organization이 형성됨. 또 가족내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유저의 사용성, 혁신적인 유저 등의 개념 정착되기 시작함

- 현재 가족이슈 : slow family life vs fast family life. 65세이상 은퇴한 건강한 연금생활자 노인가족 對 시간에 쫓기는 맞벌이 가족의 대비, service economy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

■ 핀란드의 가족여성정책 동향

- EU국가는 권역 내 국가간 정책 공유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핀란드는 EU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모성휴가와 부모휴개정책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퇴보가 우려됨
- 핀란드 정부의 우선추진 정책 중 여성관련 정책 : 공공의사결정과 활동분야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실행계획 추진, 노동시장에서 남녀 동등한 임금정책 등

■ 향후 연구진간의 교류 방안 및 자료 공유

- 가족미래 시나리오 작성 관련한 자료 및 이메일 토론 등 정보교류 지속
- 2013년도 가족미래 연구의 국제 컨퍼런스 참여 가능성 모색
- 공유 자료
 - Eva Kaunismaa(2012). Gender Mainstreaming in Educational Policy
 - Prime Minister's Office(2012). Government Foresight Report 2030: Sustainable Growth and Well-being in Finland
 - Prime Minister's Office(2010). Together and independently-the World and Finland in the 2010s
 - Prime Minister's Office(2009). Government Foresight Report on Long-Term Climate and Energy Policy:Towards a Low-carbon Finland
 - Prime Minister's Office(2007). Improving Government Foresight Reporting Procedure summary
 - Pantzar, Mika(2009). "Future Shock - Discussing the Changing

Temporal Architecture of Daily Life” This paper is based on a presentation at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inland Future Research Centre and Finland Futures Academy :Future of the Consumer Society, keynotelecture on the 29th May 2009, Tampere

- Pantzar, Mika (2000). “Consumption as Work, Play and Art - Representation of Consumer in Future Scenarios” . Design Issues, Vol. 16:3, Fall
- Pantzar, Mika. INVENTING THE NEED FOR DOMESTIC APPLIANCES - EVIDENCE FROM POST-WAR FINLAND
- Pantzar, Mika(1997). “Domestication of Everyday Life Technology: Dynamic Views on Social Histories of Artifacts” . Design Issues, Vol 13, No. 3, Autumn 1997, 52-65.

4. 스웨덴

■ 옘살라대학교

□ 전문가 : Paula Blomqvist 교수

○ 주요 논의 의제

- 현재 EU의 가족정책 의제
- 스웨덴에서의 가족정책 의제
- 여성·가족의 변화를 관찰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가족의 위험
- 가족의 위험을 둘러싼 환경요인들 중 주목해야 할 요인

○ 주요 결과

(현재 EU의 가족정책 의제)

- EU에서는 스웨덴과 달리 최근에서야 가족정책에 관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중요한 목표. work & family 양립의 문제.
- maternity leave, childcare가 주요 이슈. EU 국가들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주요 이슈임. 보육의 경우 2002년부터 EU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EU는 권고수준만 할 수 있음.

-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가지 모두의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주요 이슈임.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금지가 중요한 이슈.

(스웨덴에서의 가족정책 의제)

- 스웨덴은 EU 일반보다 선구적 의제. work & family를 넘어서서 남성의 가사참여, 돌봄참여에 관심. maternity leave, childcare는 이미 스웨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어 더 이상 이슈가 아님.
-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이 중요 이슈이며, 이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님. 18개월의 긴 부모휴가는 주로 여성이 사용하며, 남성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18개월중 2개월은 daddy month임. 일반적으로 남녀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스웨덴에서는 이슈가 아님. formal childcare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음. 1살 반부터는 90%가 childcare facility로 가며 가정내 보육은 거의 없음.
- 보육시설과 직장 간의 timegap는 거의 없음. 부모들은 오후 3-4시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며 대부분의 직장에서 3시 이후에는 공식일정이 없음.
- 노인돌봄은 일가족양립과 관계된 이슈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스웨덴의 노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주요 동인)

-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는 스웨덴에서 거의 관찰되고 있지 않음. 여성 몸의 상업화 문제 등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시장과 관련된 문제이며 정부정책의 문제가 아님. 정부 내에서 성평등 문제는 상당히 공유된 관점임.
- 돌봄의 시장화 문제도 스웨덴에서는 큰 이슈가 아님.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나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규제를 받고 있고 이를 벗어난 시설은 없음. 비용은 전혀 부모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계층에

따라 다르나 매우 낮은 수준임. 보육의 시장화는 스웨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가족의 미래에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요인)

- 어떤 가족을 상징하는가가 중요. 스웨덴의 경우 가족은 맞벌이가족이므로, 가족미래의 위협요인은 주로 노동시장요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강해지면서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한 원인일 수도 있음.
- 이혼 자체는 스웨덴 문화에서 일상적이며 이에 대한 스티그마는 거의 없음.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매주 양쪽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는데, 싸우는 부모 밑에 있기보다는 헤어져도 협력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동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물들이 많음. 이런 연구는 1990-2000년경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정설화되어 있음.
- 스웨덴에서 이민의 문제는 최근 이슈인데, 이민 가족의 아이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스웨덴 아이들만큼의 자유를 누릴수 없다는 이슈 등임. (ex. 다른 문화에서 온 여자아이들은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음).
- 정식 결혼자체는 스웨덴에서는 취향의 문제이며, 사실혼과 법적결혼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으므로 생활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 다만 여성들이 더 오래 교육받고 젊은 시기를 보내는 동안 결혼이 늦어져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어려워질 수는 있음. 이는 가족 위협요인으로 볼 수도 있음.

■ 스웨덴 미래연구소 (Institute of Future Studies)

□ 전문가 : Peter Johansson (연구원)

○ 주요 논의 의제

- 기관 소개 및 정부와의 관계
- 미래연구소에서 다루는 주제 및 방법론
- 미래연구소의 가족연구 소개
- 스웨덴의 가족·미래연구 현안

○ 주요 결과

(기관소개)

- 미래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는, 그러나 정부와 독립된 정부출연기관임. 30명의 연구자가 있으며 일부는 대학과 2중으로 소속.
- 미래연구소의 Director는 연구소 board에 의해 임명됨. board는 정부가 임명함. 현재 Bengt Westerberg(Chair, former government minister) 등 9명으로 구성

(기관에서 다루는 주제 및 방법론)

-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이 한 축이며, 인구 및 가족추계 등이 또다른 중요한 한 축. 그 외 사회통합 관련 연구 등.
- 대부분의 스웨덴 미래연구소의 미래예측은 시나리오나 델파이조사 등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고 있지 않으며, 실증수치에 기반(empirical approach)하여 미래 trend 추적. 인구학적 추계가 대표적.
- 최근 미래연구소에서는 미래연구와 관련된 방법론 개발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실행중. 네트워크방법론, social mechanism 연구등이 기획, 운영중.

(미래연구소의 가족연구)

- 현재의 출산율과 이민자 증가를 기반으로 한 인구학적 추계연구
- 복지국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장기 추세 연구
- 아동빈곤연구
- 스웨덴의 무자녀가족연구

(스웨덴의 가족.미래연구 현안)

- 최근 논의 중 가사노동서비스의 세금공제에 대한 부분. 가사노동서비스가 비공식노동에서 이루어져 공식집계가 되지 않음. 세금공제에 포함함으로써 가사노동서비스의 공식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가사노동은 주로 cleaning. 현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만 가사노동서비스가 공식제 공중임.

■ 스톡홀름대학교

□ 전문가 : Daine Sainsbury 교수

○ 주요 논의 의제

- 현재 EU·스웨덴의 가족정책 의제
-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주요 동인
- 가족의 미래에 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요인

○ 주요 결과

(현재 스웨덴·EU의 가족정책 의제)

- 양육수당: 2006년 중도우파정부 집권후 재도입. 그러나 사용율이 매우 낮은 수준,
- 부모휴가와 부모보험: 남성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1/2 또는 1/3을 남성이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주는 제도. 그러나 tax를 활용하여 급여를 더 주는데 그 신청과정과 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사용율이 낮은 수준.
- 보육시설의 경우 3~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기도 함. 보육시설 확충은 10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모든 아동의 보육권리 보장, 독일의 경우 0~2세 보육시설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지역에 따라 3세 이상도 공급부족.
- EU 차원의 이혼 규정 단일화 논의. 스웨덴은 다른 EU 국가들보다 훨씬 급진적이므로 좋지 않은 상황. 스웨덴에서 이혼은 자연스러우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

(현재 스웨덴·EU의 여성정책 의제)

- 임금의 gender gap: 2006년 이후 메인 이슈. 노조의 힘 약화와 노조 내부의 갈등(남성중심노조-여성중심노조 간)
- 기업 이사회에 여성지위문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얼마나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

(가족의 위험요인 및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주요 동인)

- 돌봄의 시장화: 2006년 우파정부 집권 이후 보육시설의 민영화를 추진,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민영화하는 것. 그러나 보육시설에서의 시장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음. 시장화가 논의되는 것은 주로 elderly care 부분, 미국 회사들이 설립.
- 이번 정부에서 돌봄 관련 서비스를 tax benefit과 연결. 가사노동의 세금공제 등. tax credit의 역진성 문제.
- 돌봄정책의 분권화. 돌봄의 책임을 어떤 정부가 질 것인가에 대한 갈등.
- care deficit: 여성이 일하러 나가면, 다른 여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남성과 care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
- 가족규모축소는 스웨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1930년대에 인구학적 위기가 있었고 1940년대에는 1명 아동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지고 있고 인구가 증가중임. 세대수감소, 핵가족화 논의는 스웨덴에서는 1950년대에 이루어지고 현재 거의 종결.
- feminism에 대한 backlash는 스웨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님. 정당들은 모두 페미니스트정당임을 자처하며, 반여성적인 극우파 정당은 이번에 겨우 정부에 입성하기는 했음. 오히려 페미니즘 내부의 갈등이 문제.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우파들이 조금씩 힘을 얻는 중.
- 기술발전의 경우 스웨덴은 기술발전이 빠른 국가. 1950-60년대 가사노동 및 쇼핑에서 기술도입이 빨랐음. 재생산기술의 경우 낙태가 더 어려워질 위험도 있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낙태를 어렵게 하는 기술을 발명할 수도. 그러나 기술은 중립적이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 그러나 스웨덴에서 낙태권은 1970년대부터 보장되었으며 이를 반대하던 기민당, 농민당들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표면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 못함.
- 결혼은 스웨덴에서 하나의 유행임. 1960년대에는 안하는 것이 유행이다가, 큰 결혼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다가, 다시 안하는 것, 다시 교외결혼 등으로 유행이 바뀜. 결혼압력이 적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을 생각함.
-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남성들에 대한 이민정책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위주, 여성들에 대한 이민정책은 가족프로그램 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음.

■ 스웨덴의 가족여성정책 동향

- 양육수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수당. 수당수준이 낮으므로 이용율이 낮은 편이고, 보육시설의 제도화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를 흔들지는 못함.
- 부모휴가의 equality bonus: 남녀가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 도입. 조세기반으로 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유리하며, 제도의 복잡성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함.
- 가사서비스의 세금공제: 가사서비스 구매가 비공식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를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사서비스 세금공제제도 도입
- 이민정책: 이민가족 내의 아동이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스웨덴 아동만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중, 또한 남성에 대한 이민정책은 사회정책 vs 여성에 대한 이민정책은 가족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민정책에서의 성별 차이문제가 떠오르고 있음.

■ 향후 연구진간의 교류 방안 및 공유 자료

- 스웨덴 미래연구소의 인구추계 등 미래연구 연구물 및 진행중인 미래연구 방법론 자료
- 스웨덴 여성·가족정책 연구
- 2013년도 가족미래 연구의 국제 컨퍼런스 참여 가능성 모색
- 공유자료
 - Bo Bengtsson, Per Strömblad och Ann-Helén Bay,(Eds.), Diversity, Inclusion and Citizenship in Scandinavia.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Lindh, L. & Hong, Y. (2011) Swedish Fertility Swings and Public Expenditure for Children
 - Lundqvist, T.(2009) The Emergence of Foresight Activities in Swedish Government Authorities

- Blomqvist, P.(2004) “The Choice Revolution. Privatization of Swedish Social Services in the 1990s” ,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 38, nr 2. 139–155.
- Johansson, P. (2009) “Taxation and the politics of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The case of tax reduction for household services in Sweden” , A presented paper at the 7th ESPAnet conference 2009 Stream nr. 8b –Financing the Welfare State
- Hong, Y. & Corman, D. Women’ s Return to Work after First Birth in Sweden during 1980–2000
- Palme,, J., Nelson,, K. & Sjöberg,, O. (2009) European Social Models, Protection and Inclusion, Renate Minas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Research Report 2009/1.
- Morel,N.,Palier, B. & Palme, J.(2009) What Future for Social Investment?,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Research Report 2009/2, 101p.
- Sainsbury, D. (2006) “Immigrants’ social righ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lfare regimes, forms in immigration and immigration policy regimes” ,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August 2006 vol. 16, no. 3 229–244
- Gavanas, A.(201) Who Cleans the Welfare State? Migration, Informalization, Social Exclusion and Domestic Services in Stockholm, Research Report 2010 no.3
- Zamac,J., Hallberg, D. & Lindh, T.(2008) Low Fertility and Long Run Growth in an Economy with a Large Public Sector, Working Paper 2008 no.11